

조선업종 산재발생 확 줄인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조선업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07년 2,065명, 08년 2,375명, 09년 2,41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해율(07년 1.55%, 08년 1.76%, 09년 1.41%)도 산업현장 평균 재해율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1%였던 재해율을 2012년까지 1.2%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크게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조선업의 생산 시스템 및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조선소(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복합성, 이동성 및 생산시스템을 반영한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Ship-building Safety-Health Management)' 체계를 보급해나가고, 중규모 조선소(상시근로자 수 50~20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기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500인 이상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2명'에서 '상시근로자 일정 비율 증가 시 추가 선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나가고, 현재 건설업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선박건조·수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기로 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노동부 윤양배 안전보건지도과장은 "수주량과 건조량에 있어서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조선업이 큰 산업(Big Industry)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Great Industry)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

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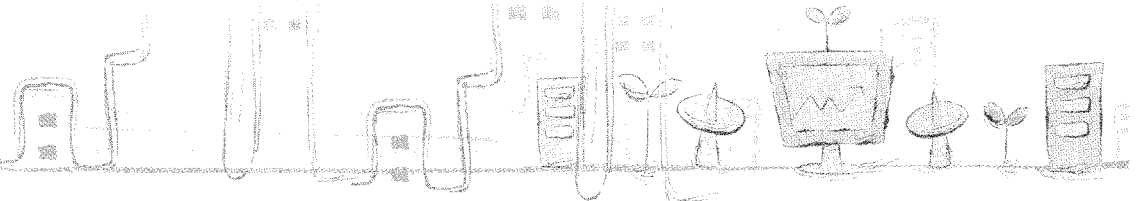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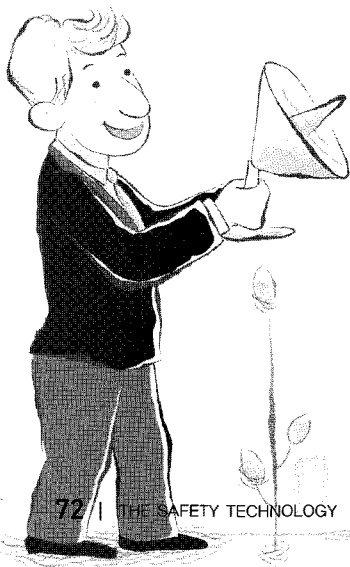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집중 호우가 잦아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되어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현상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00~2009년)의 질식재해사망자 189명 가운데, 6~8월에만 80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동안 부상자는 54명이 발생했을 정도로, 질식재해의 경우 부상자보다 사망자의 발생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8월까지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작업전·작업중 환기 여부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사업장에서 자체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현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국 25개 일선 지도원을 통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여름철 맨홀, 정화조, 탱크내의 작업은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름철에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뱃섬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하므로, 근로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강화된다.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전국 지방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지도,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사업장 점검,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를 따로 주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이 산업재해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산업현장 1만개소 합동점검

노동부와 검찰이 7월 2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 10,00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되면서 점검물량이 예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안전 점검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경각심을 확산 시키는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산재 취약업종으로서 재해가 다발했거나, 굴착작업·터널작업·타워크레인 설치현장, 층고 6미터 이상의 공사장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사업장이다.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사업의 경우 2009~2010년 중재해 발생사업장, 건설업은 20억이상 건설현장, 제조업은 사고성 재해 다발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된다.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서비스업은 전도·협착,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협착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사용·작업중지 등의 엄격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나왔다

10대 건설사 기초안전 교육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지난해 국고를 활용, 16개 수탁교육기관을 통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1,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10대 건설사 임원들은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 이를 건설사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엔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대 건설업체 근로자들은 해당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이다.

수탁교육기관은 건설업체에서 직접 선정하며, 기관이 선정되면 건설업체 현장 별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교육은 건설업체별 5,000명, 전체 5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요예산은 해당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비에서 충당된다. 수탁교육기관의 강사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건설업체에서 직접 처리한다.

대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기관 관리, 교육프로그램 구성, 교육이수자 관리, 교재개발 및 보급, 사업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설안전교육이수자들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년에 도입할 계획에 있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2012년에 울산혁신도시로 이전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에 조성중인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10개) 가운데 부지규모가 가장 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이며,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3번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2년 12월까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해 신사옥건립에 따른 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혁신도시 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본부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 총 3개 기관, 연면적 4만1406㎡ 규모로 건립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2년 12월까지 420여명의 본부 임·직원들이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

